

광주특별시의회, 정무직 부시장 적법·공정성 따진다

민형배 시장·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조례 위반 등 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민 시장은 지난 6일 시민추천제를 통해 지방직 부시장(정무부시장·차관급)에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을

지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특별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전략산업·문화·관광·체육을 맡고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농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산림을 맡는다.

운영위는 민 시장이 시민추천제로 추진한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아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

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 검토 주제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집행부 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 적절성을 검증해 향후 인사청문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 시장과 집행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도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의회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이번 안건 상정의 배경이 됐다.

운영위는 오는 14일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천제 추진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

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제,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민 시장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근거와 시민추천제 분야별 최종 후보자 평가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사전에 조례와 공모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것이다”며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부시장 인사청문 앞서 관련 조례 정비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담당업무 연계해 혼선 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시민추천 과정의 추천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광주특별시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혼선과 시의회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한 후보자가 임명

된 이후 실제로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시민추천 과정에서 제시한 전문 분야와 실제 담당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광주특별시 출범 초기 안정적 시정 운영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 등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필요 시 의장단 간담회, 실국과 상임위 간 정기적 간담회를 여는 등 시의회와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광주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구청장협의회가 성령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 추진…구청장協 “환영”

“자치·재정 기반 강화해 특별시 효과 시민 체감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광주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구청장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며 “전남광주 통합 이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광역행정체계에서 27개 기초지방정부가 보다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지방정부 간 자치권과 재정 여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협의회는 “같은 통합특별시의 시민이면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달라진다면 통합의 취지와 지방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구 42만명 규모인 북구의 정부지원금은 1329억원인 반면 인구 6만명 규모의 화순군은 314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치와 재정의 불균형까지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이 광주를 별도의

지방정부로 분리하는 조치가 아니라 기초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5개 지역은 시로 전환된 이후에도 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그대로 존재한다”며 “광주를 다섯 개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주차, 복지·돌봄, 교육·문화, 생활SOC와 도시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지역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기초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밝혔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갈등 현안 관련 공론화 플랫폼 역할 할 것”

안도걸, 민주당 광주특별시장위원장 도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후인 안도걸 의원은 (동구 남구을·사진)은 10일 “갈등이 첨예한 현안과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나 시장직을 역임한 분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출입전남광주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된 후 현안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데 대해 “문제 해결의 결문에 관계없이 정치적인 이해를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만을 제시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현안들은 그냥 두면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돼 해결이 어렵다”며 “여러 원로나 지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어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데 대해 견해를 묻자 “우선 특별시 안에서 광주 종합행정을 다룬 뒤 점차적으로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을 높여 점진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광주의 교통행정, 상수도행정,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은 5개구가 상호 연계돼 있어 하나 하나를 떼어내 자치하기는 힘들다”며 “또 자치구 시 전환은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자치구와 형평이 맞지 않는 특별한 행정체제를 만들게 돼 정부나 특별시 입장에서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선이 되면 광주특별시 첫 예산에 신경을 쓰겠다”며 “여기에 집중해서 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첨단산업 투자를 성공시켜 지역 경제의 대도약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달까지 국회에 상정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기획예산처 임장이 워낙 난해해서 민형배 특별시장이 우선 답을 지어야 할 것”이라며 “제가 그걸 도와서 특별시 첫 예산안이 잘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송영길, 호남 순회경선 앞두고 텃밭 민심 살피

영광 한빛원전 방문

전력 확보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호남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텃밭 민심을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는 영광 한빛원전지역본부를 찾아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전력망 확보 방안을 모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가 속도가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송 후보는 “핵심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한빛원전을 찾았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팹 4기가 쓰는 전력은 6.3GW로, 전기가 없으면 반도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수명이 끝나가는 한빛원전 6기의 미래, 출력 제한에 묶여 버려지고 있는 호남의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을 꼼꼼히 받아 적었다”며 “안전 최우선을 전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영광 한빛원전지역본부를 찾아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전력망 확보 방안을 모색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전력 믹스를 통해 전기, 물, 토지, 사람이 모두 있는 서남권 800조 반도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 출신인 그는 고향인 호남에서의 발전을 노리고 있다.

현재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9.47%(1만9715표)를 획득하고 있는 그는 권리당원 30%가 집중된 고향 호남에서 발전을 거듭하겠다는 의지로 연일 전남광주와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호남과 수도권을 합하면 권리당원의 71%다. 160만명의 권리당원 중 지금 110만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 게임이 이때의 원상 경선”이라며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호소하려 한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영광에서의 일정을 소화한 송 후보는 오후 전주로 이동해 필승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권 순회경선은 오는 15일 열린다. 이산화 기자 goback@

“메가프로젝트 1순위…서울·강릉 재보선 승리”

김민석, 국회 소통관서 ‘약속과 호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10일 “호남대환 3대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고, 서울·강릉 재보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약속과 호소’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에서 충청, 영남과 전국으로 반도체와 AI가 확산하는 호남·대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당의 제1과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시절에 발차한 새만금 현대차 투자를 가속 확대하고, 전북의 후속 메가투자 유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순회경선을 앞두고 “1주일 후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이 갈린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가 전대의 본질이고 선택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 책임하에 2027년 서울시장,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를 즉각 시작하고, 선거 후 당 대표

재신임을 물어 무너진 책임정치 윤리를 재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서울 강북, 강서,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의 접경지역 등 수도권 역차별 정상화 플랜 가동 △조국혁신당과의 상생 협력 대화 등 민주·진보 연대 개시, 대대적인 민생·실용 인재 영입 개시, 당 차원의 주거 공급 드라이브 본격화, 품격 있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 등 민생 경제 통합 드라이브 시작 등을 밝혔다.

또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 이탈 현상과 관련해 김 후보는 “청년 시민 전용 토론 문화 공간인 ‘서울 제2광화문시장 개설’, 청년·학생 당정협의 추진, 청년 당원 정치행정 인턴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과 수도권의 판세를 묻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추세에서는 제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호남에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가 예상되고, 수도권에서도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0일 국회 소통관서 공약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曁남

‘언론이 친김민석’이라는 정정보고 후보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본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지나친 것”이라며 “과공비례”라고 말했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정 후보를 잘라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관 단체인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이 상황에) 관여된 분들이 계신다면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